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업 무 현 황

[주요 정책]

2015. 9. 1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금융개혁 추진	1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9
가. 거래소 경쟁력 강화	9
나. 핀테크 육성	10
다. 기술금융 활성화	12
라. 정책금융기관 기능 제고	13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14
바.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및 금융중심지 추진 ...	15
사. 금융기관 민영화 추진	16
3.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8
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추진	18
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제고	19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
라.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22
마. 기업공시제도 개편	23
4. 안정적 금융시스템 기반 구축	24
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24
나.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26
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27

1

금융개혁 추진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4대 구조개혁 과제로서 금융개혁 추진

(1) 그 동안의 추진성과

추진방향 및 체계

□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이를 통해 금융개혁이 지향하는 비전 3가지를 달성

- ①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증식
- ② 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 ③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 '15.3월, “3+1 추진체계” 구축 및 기본방향 수립

-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심의기구
- 금융개혁 추진단 : 관계부처 1급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 협업과제 추진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원 합동으로 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 발굴·해소
- 금융개혁 자문단 : 학계·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연구용역 및 안건 자문

주요 개혁과제 추진현황

① 보수적 금융관행 혁신 → 적극적·창의적 금융문화 정착

○ 컨설팅 검사도입 등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향(4.22)

*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확인서·문답서 징구 관행 폐지 등

○ 기관·금전제재 중심의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9.2)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6.10)

② 거래소 구조개편 등 자본시장 육성

- 코넥스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방향(4.23)
- 거래소 구조개편 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7.2)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7.20)

③ 핀테크 활성화 및 다양한 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 사전규제 최소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향(1.27)
- 핀테크 지원센터(3.30)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설치(4.14)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방안 마련(5.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6.18), 클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 국회 통과(7.6)

④ “대출” 중심에서 “투자” 기반 기술금융으로 확대

- 기술금융 상위 은행 및 TCB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4~5월)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추진(6.8)

* '15.7월말 기준 약 44.2조원, 68,581건 규모로 기술금융 공급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추진

-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 관리 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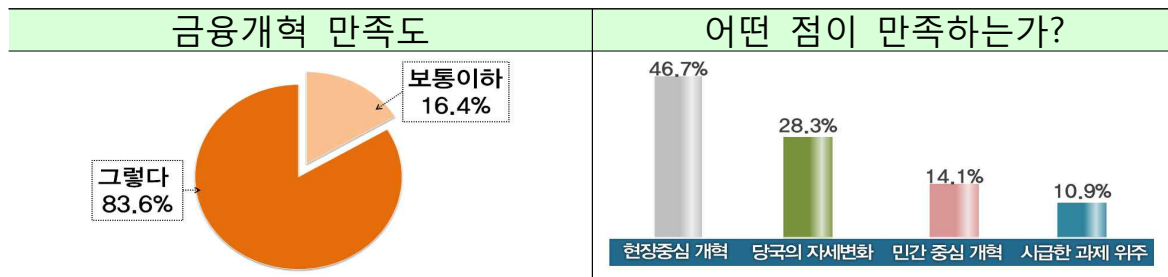
⑥ 외환·세제·연금 분야의 부처협업체계 구축·가동

-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외환·세제·투자금융·연금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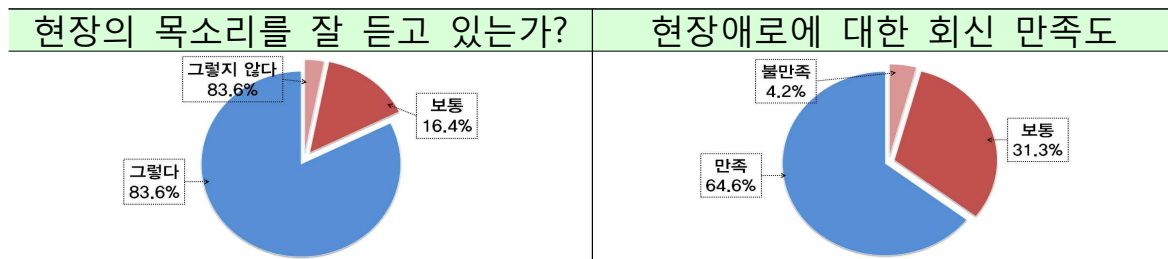
참고1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주요 결과

- (조사주체·시기) 한국 갤럽(전화 설문), 6.25일 ~ 6.29일
- (대상) 총 600여명의 인력 풀 중 110명 샘플링
 - 금융권 CEO(10인), 금융권 실무자(60인)
 - 학계/연구원(20인), 언론(10인), 기술금융 기업/IT 기업(1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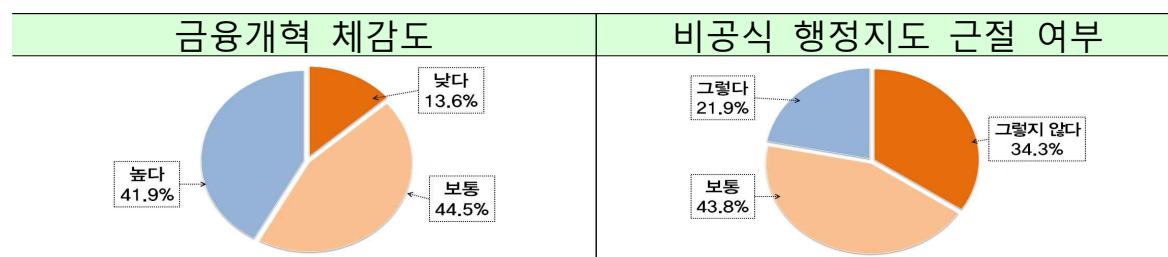
□ 금융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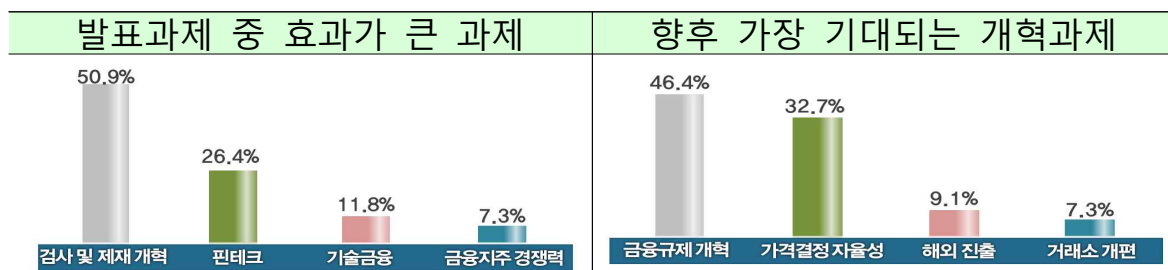
□ 현장점검반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 금융개혁 체감도는 보통 답변이 가장 많음



□ 향후 가장 기대되는 과제는 금융규제개혁



참고2

검사·제재 개혁의 주요내용

①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마련 (4.22)

-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검사 현장에 반영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검부담 완화

* 컨설팅 검사 도입,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확인서·문답서 징구 관행 폐지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추진

[OO은행 종합검사시 임직원의 발언 ('15.4.13~5.13)]

"은행의 합리적 의견을 검사역이 적극 수용하는 등 '단순 지적위주가 아닌 컨설팅 방식의 검사'라는 검사관행 개선의 취지를 느낄 수 있었음"

"확인서 징구방식이 검사의견서 교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인서 제출시 있었던 검사역과 은행 직원의 갈등과 마찰이 사라졌습니다."

"면담시 은행 임직원의 일정, 사정 등을 최우선 반영하여 시간 조정하는 등 현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②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6.10)

- 제재심 등의 안건 중 본인 관련 부분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③ 제재로 인해 금융사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문제점 개선(6.25)

-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운 문제 개선(3년→1년으로 제한기간 단축)

* 최근 3년 이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68개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가능

④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9.2)

- 직원 잘못된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하는 체제 정착
-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관행 철폐
- 금전제재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약 3~5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 위탁(9개법 개정필요)

참고3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한 제도개선

□ 그 동안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9월초까지 215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약 2,65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음

* 금융위, 금감원, 협회 파견인원으로 구성된 은행·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4개팀으로 출범('15.3.26)하여 4.2일 최초 현장방문

○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수용률 46%) 전부를 회신 완료

○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현장점검반 출범 이후 84건 접수하여 이중 43건에 대해 회신완료

* 접수 및 보완 중 14건, 내용검토 중 27건

○ 금융위는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상시조직으로 「금융현장지원단*」을 설치('15.8.13)

* 단장, 현장점검팀·현장지원팀 2개팀으로 구성

□ 향후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 현장점검을 재포지셔닝할 계획

① 그동안의 「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 점검 체계를 상시화·체계화해 나갈 예정

②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와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금융개혁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대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계획

③ 아울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회사, 금융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을 강화할 예정

(2) 앞으로의 추진방향

- ◇ 금융규제개혁 및 자산관리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 이행방안도 차질없이 준비

주요 추진과제

①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 (15.6월)를 토대로 규제 하나 하나에 합리화 기준(7개)을 적용하여 점검·개선

*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 합리화 기준 >

- ①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 ② 글로벌 기준에 부합
- ③ 오프라인 → 온라인, ④ 포지티브 → 네거티브, ⑤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 ⑥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⑦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 규제 또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각종 구두지도,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정비
-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②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추진

- 금융투자, 자산운용, 보험 등 세부 금융권역별로 경쟁과 자율 제고 등 개별 금융업권의 발전 방안 마련
- 특히, 저금리·고령화의 진전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업의 자산관리기능 강화

* 예) 업권별 칸막이 제거, 투자자문업 육성 등 →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과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수요 충족

③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 맞춤형 정책금융 및 정책-민간금융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

④ 금융교육 대상 및 횟수 대폭 확대 등 금융교육 강화

- '1사1교 금융교육' 등 금융회사와 학교간 연계 강화, 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 등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⑤ 금융외교채널 확충 등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 중점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등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제거

⑥ 새로운 금융모델을 차질없이 도입하여 혁신적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신청 접수(9월말)를 진행하여 예비인가(12월말)를 거쳐 '16년 상반기 본인가 및 출범
- 클라우드 펀딩 시행('16.1월)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및 중앙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
-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시('15.4/4분기)
- 은행 계좌이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6.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

⑦ 부처 협업과제 지속 추진

-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 및 금융산업 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금제도 개선 추진 등

이행 및 일정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 → 상시 평가 등 지속 점검·보완

□ 주요 개혁과제들은 연내 신속히 확정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은 9~11월중 순차적으로 마련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거래소 구조개편 등 既 발표한 과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 추진

- 검사·제재 관행, 핀테크, 기술금융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금융개혁 자문단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4/4분기)
- 전문가 및 이용자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12월중)

□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 금융규제개혁 등 개혁방안 확정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既 상정된 법안: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상정 필요 법안: 전자증권법(전자증권도입, 10월), 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12월), 금융지주회사법 등 9개 법안(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16년) 등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 자본시장 선진화, 핀테크 육성, 정책금융 기능제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가. 거래소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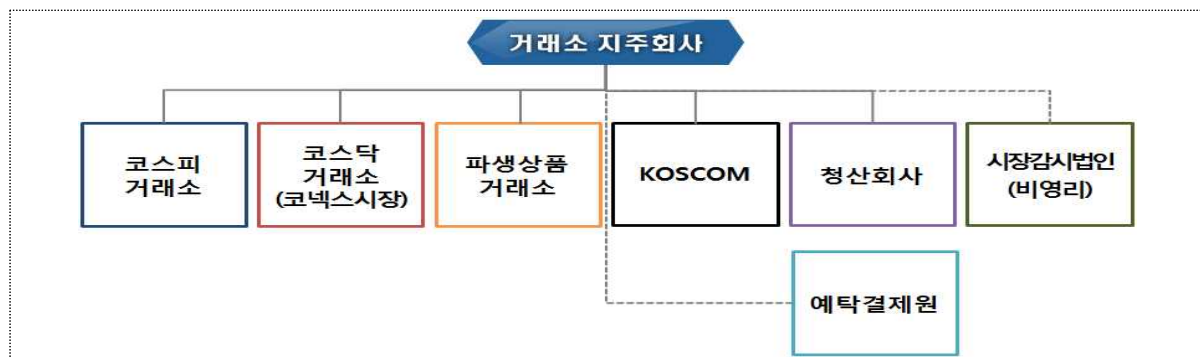
(1) 추진 실적

- 지난 7.2일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와 공공기관적 경영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 → 지주회사 전환 및 IPO 추진
 - 거래소가 IPO를 통해 완전한 영리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공적기능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
 - 이를 위해 IPO의 전제조건으로 상장차익 출연, 예탁결제원 지분 정리, 독립 시장감시법인 제도 도입 추진

(2) 향후 계획

-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준비
- 자본시장법 개정 후 개정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예탁원 지분정리, 시장감시법인 설립 등을 전제로 거래소 지주회사 IPO 추진

【 거래소 지주회사의 기본 구조 】



나. 핀테크 육성

(1) 추진 실적

- (진입 장벽 완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항목 간소화(5월) 등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旣 발의(7.7일)

- (핀테크 생태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3월) 및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협력 MOU 체결** 지원 등

* 사업성 검토, 금융회사 연계 등 약 175건의 상담 제공 / 총 4회의 Demo-day 개최

** 기업가치평가, 보안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건의 제휴·협력 체결('15.8월)

-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3월) 폐지 등 기존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

- (다양한 서비스 출시기반 마련)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방안 마련(5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6월), 클라우드 펀딩 입법화(7월)

(2) 향후 계획

-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개선 노력 지속

- 인터넷 전문은행¹⁾, 클라우드 펀딩²⁾,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³⁾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조속한 출시를 차질 없이 준비

1) 현행법 체계 下 금년내 1~2개 시범인가(12월중)

2) 하위법령 마련(10월),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12월) 등 제도 시행('16.1월) 준비

3) 생·손보험회로 나뉘어진 보험 비교공시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개편(10월)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추진 실적

- ICT·금융 융합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방안’ 발표(6.18)

* 주요국의 경우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 중('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 20여개, 일본 8개 및 최근 중국도 2개 인가·영업중)

□ 추진 방안

- (1단계) 현행법 체계下에서 1~2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9.30~10.1), 심사(10~11월)를 거쳐 예비인가(12월), 본인가('16년) 추진
- (2단계) 은행법 개정안(7.3, 신동우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근거하여 추가 인가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의, 최저자본금 및 은행지분 보유 규제 일부 완화 등

-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

*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규제를 현행 4% → ‘50%이내’로 완화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자기자본의 25%→10%)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자체를 금지

다. 기술금융 활성화

(1) 추진 실적

- 기술금융 인프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기술DB(TDB)를 조성하고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대출 개시('14.7.~)
-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내실화 및 기술기반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추진('15.6.8.)
 - * (여신) 형식적인 기술평가 방지를 위한 실적 집계방식 및 평가체계 개선 (투자)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IP투자펀드)
-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15.8.27.)
- '15.7월까지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총 68,581건, 약 44.4조원의 대출자금이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잔액 기준, '14.7.~'15.7.)
 - * '15.7월 중 공급된 기술신용대출 2.6조원 중 새로운 TECH평가기준에 따른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신규대출 및 대출증액분의 합계)은 2.2조원 규모(83%)
-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일반 중기대출 대비 건당 대출금액 4.6억원 증가(2→6.6억원), 금리 0.35%p 인하(3.94→3.59%)
 - * 기술신용대출 이용기업 중 82.3%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400개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금융 이용실태 및 의견조사('15.4.)」)

(2) 향후 계획

- 우수 기술기업에 연간 20조원의 기술신용대출*을 신규 공급
 -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기준(기간연장 및 단순대환 제외) : '15년 약 26조원 공급 전망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에 따라 '16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실시
- 연내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통해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등 기술형 모험자본을 육성

라. 정책금융기관 기능 제고

(1) 추진 실적

- 그동안 정책금융은 기관 간 중복을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

*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13.8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14.1월)

- 정책금융 단일화를 위해 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통합 산은' 출범('15.1월)
- 선박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자회사로서 해운보증기구(한국 해양보증보험) 설립('15.8월)
- 창업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

* 우수 기술력(AA등급 이상: 자동면제, A등급: 선별면제) 보유 기업에 대한 대표이사 연대보증 면제('15.4월)

* 연대보증 면제 기업(BBB이상)을 창업 1년내 → 3년내로 확대('15.9월)

- 한편, 창조 경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창의·혁신·기술기업의 성장 촉진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과 TF를 구성하고 정책금융의 역할강화 방안 검토 중('15.4월)

<정책금융(산은, 기은, 신·기보) 역할강화 기본 방향>

- ◇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
- ◇ 정책 금융기관별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민간 협업을 강화

(2)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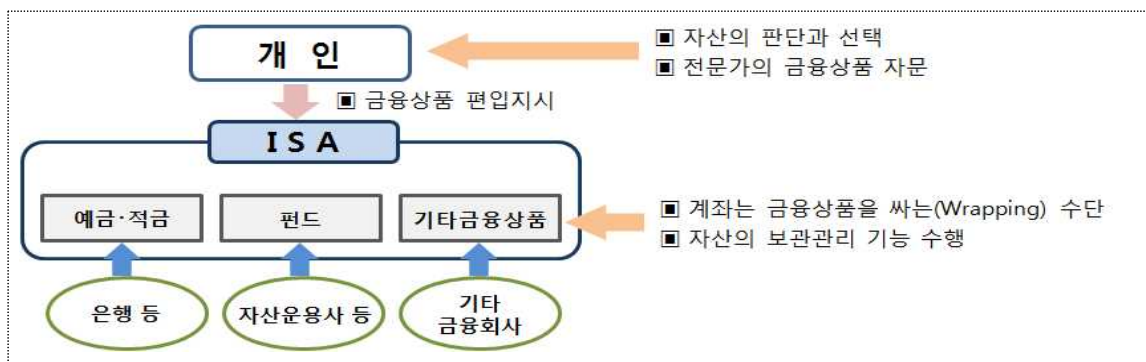
-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1) 추진 실적

□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프로그램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 발표(8.6)

- (기본구조) 가입자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하는 계좌



- (가입대상·납입한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¹⁾가 가입 가능하고,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5년간²⁾ 납입

1)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2) 15~29세 가입자·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을 5→3년으로 완화

- (세제혜택) 계좌내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2) 향후 계획

□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9.11)되었으며, 하반기 중 국회 통과시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

-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바.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및 금융중심지 추진

(1) 추진 실적

□ (해외사업) 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15.7월) 및 추진

- 주요진출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 6개은행 공동대출·무보 보증 21억불 해외SOC펀드 협약**, 해외진출 걸림돌 규제 개선***

* 한중일('06~), 일본('12~), 영국('14~), 인니('15~) 개최 / 베트남('15.8) 개최합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각 3.5억불 금융지원 협약 체결(8.17일)

***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유효기간 연장, 은행 일부 해외법인의 내부통제 담당직원 겸직 허용 등

□ (금융중심지 추진) 「금융중심지법」 제정('08) 및 금융중심지 지정(서울*·부산**, '09), 3차례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 추진

- IR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홍보, 외국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 구축 및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

* (서울시) 자산운용업 등 중점 투자유치산업을 선정하고, 자금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5.7, 조례제정)

** (부산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치('14.9) 및 한국선박금융 등 해양금융 전문기관 유치('15.5)로 해양금융 기능 강화

(2) 향후 계획

□ (해외사업) 정례협의 대상국 확대(중국, 인도, 미얀마 등), 해외SOC 펀드 공동대출 본격화 및 잔여 규제개선과제* 연내 완료

* 해외지사 등의 설립절차, 회사형 공모펀드의 최소지분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증제한, 보험사 해외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개선

□ (금융중심지 추진) 긴 호흡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4차 기본계획*('17~'19) 수립

* 금융규제방향 변화, 중국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

사. 금융기관 민영화 추진

우리은행

(1) 추진 실적

- ☐ '10년 이후 4차례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음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5.7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 발표
 - 매각방식은 민영화 3대 원칙을 감안하면서 매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매각방식 추진
 - * 민영화 3대 원칙 : 회수극대화, 조기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 과점주주 형태의 지배구조는 소수의 주요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
 - 매각물량은 민영화 과정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upside potential) 향유로 회수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예보가 일정 지분을 보유
 - 먼저, 과점주주 매각방식 또는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을 추진하여 예보 지분 48.07%中 30%~40%를 매각하고,
 - * 금융 관련법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최소지분으로 규모로 보고 있는 30% 이상을 매각대상으로 설정
 - 잔여 지분(최대 18.07%)는 기업가치 상승을 향유하며 매각
 - 조기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병행 추진
 - 우리은행은 자체적인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원점(Zero-base) 제도 개선 추진

(2) 향후 계획

- ☐ 기업가치 제고, 시장수요 확충을 통해 매각여건을 성숙시키고 면밀히 매각수요자를 탐색(예: 중동국부펀드 등)하여 민영화 추진

대우증권 등 산은 자회사 매각

(1) 추진 실적

- '13.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시 산은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매각 추진 계획을 밝힘

* 매각대상 :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KDB생명

** KDB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생명은 '14년 중 2차례 매각을 추진

- 금년 초 「2015년 업무계획」 중 대우증권 매각 추진 계획을 발표

- '15.8.24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의 매각계획을 발표

* 매각 대상(보유주식 전량) :

대우증권 1억4,048만주(43%), 자산운용 778만주(100%), 캐피탈 6,212만주 (99.9%)

- '16.1/4분기까지 조속히 매각하고, 대우증권 등 매각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

* 매각 원칙 : ❶ 조속한 매각 ❷ 매각가치 극대화 ❸ 국내 자본시장 발전

- '15.9.4 산업은행은 원활한 매각 진행을 위해 매각자문사 등을 선정(국내·국외 매각자문사 각 1개, 법률·회계 자문사 1개)

(2) 향후 계획

- 산업은행은 10월 중 매각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진행할 예정

- '15년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16.1/4분기까지 매각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 비금융자회사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 및 투자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속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

3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추진

(1) 추진 실적

-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마련(6.23)
 -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에 중점
- 동 방안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 세부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중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12%→10.5%, 8월)
 -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 일자리 제공 -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지원 실시(8월말)
 - *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최대 월 20만원) 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3년 적립시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한도(50만원) 신용카드 발급(7월)
 - ※ 그외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1천만원→2천만원), 저소득·저신용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1,200만원 이내) 등 실시 중(7월)

(2) 향후 계획

-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34.9%→29.9%) 함으로써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 금리 인하 등 최근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

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제고

(1) 추진 배경

- 은행,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지역 고객기반 위축
-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서민 중심 영업에서 벗어남에 따라 문제점 유발
 - 대형 저축은행의 광역화* 및 전국단위 공격적 영업** 증가
 - * 저축은행은 대부업계·외국계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
 - ** 공격적 대출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국단위 고금리 신용대출 등
 -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비과세 예탁금 위주의 영업방식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 약화

(2) 주요방안 (9.10일,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

- ① 민간서민금융회사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외형확대를 지양*하여 서민금융 공급 강화
 - * 영업구역 확대시 합병 인가 불허(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시만 예외적 허용)
- ②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서민에 필요한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마련*
 - * 고객접점 확대 지원, 부대업무 우선 승인 등
- ③ 여신심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 합리화
 - *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 신용평가시스템 정교화
- ④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대형사 건전성 규제를 강화(자본/자산건전성 기준 강화)하고, 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추진 실적

□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월) 등에 따라 비교공시,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 ① (비교공시) 권역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정보를 통합 비교공시('15.7월 방안 발표, '16년 가동 예정)
- ② (실태평가) 기존 금융회사 민원 건수 위주 민원발생평가 대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종합 평가('15.7월 방안 발표, '16년 도입 예정)
- ③ (금융교육)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 교과 반영(교육부와 협의) 추진 중

* 금융위(부위원장)·금감원·예보·신복위·청교협·금융협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

- 또한, 금융소비의 쏠과정*을 규율하는 기본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법안소위 계류)

* 사전 정보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 피해구제

□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추진

- '14년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적발된 인원은 84,385명으로 '13년 대비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

【 보험사기 적발 현황 】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적발금액(억원)	4,533	5,189	5,997	15.6
적발인원(명)	83,181	77,112	84,385	9.4

- 보험사기 **취약분야**(의료기관,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인력을 보강(특별조사팀 : 1팀→2팀)하여 **기획조사 역량 강화**

* 외제차량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 의심자 20명, 13억원 적발('15.3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불법 사무장병원 57개소 조사 실시('15.6월)

-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교육·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험사기 예방 관련 **홍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 보험사기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예방광고 및 프로야구 중계 케이블TV 가상광고 등 실시

(2)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법령外** 시행가능한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

-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일정기간(예: 7일)내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15.9월 중 방안 발표 예정)

- **금융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행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15.10월 예정)

- 또한, **금소법 조속 제정**을 위해 국회협의 등 노력 지속 경주

-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등 입법노력 지속('15.하반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13.8.27일)

- 조직적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에 **사회관계망 분석기법(SNA)*** 도입('16.상반기)

* 보험사기가 의심자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의심자 그룹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정비업체·가해자·피해자, 병원·환자 공모형 보험사기에 대응

라.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1) 추진 실적

□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이전함으로써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구축

* 각 은행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고객 누구나 무료로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구축한 세계 최초의 통합 인프라임(www.payinfo.or.kr)

** 영국·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고객이 은행지점을 방문하면 서비스 제공 중

○ Payinfo를 통해 은행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필요시 건별로 선택·'해지' 가능('15.7.1)

【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 개요 】

○ (주요 서비스) 자동이체* 연결 계좌를 변경

*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료 납부(예: 통신비), 고객 스스로 설정한 자동송금(예: 월세·동창회비)

○ (부가 서비스) 리다이렉션,* 기존 계좌 해지, 잔고이전 등

* 요금청구기관이 오류 등으로 기존 계좌로부터 출금 요청시 계좌 변경내역을 통보

(2) 향후 계획

□ Payinfo를 통해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계좌'변경'서비스를 시작(10월말) → 전체 요금청구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산('16.6월)

* 요금청구기관(약 7만개) 중 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총 62개)이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약 2/3 차지('15.6월)

○ Payinfo(온라인) 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에서도 자동이체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서비스 제공('16.2월)

마. 기업공시제도 개편

(1) 추진 실적

- 현장간담회('15.5월)를 통해 제기된 기업 공시담당자, 투자 정보 수요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시제도 개선 추진

*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제도의 복잡성 및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 해소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정보 신뢰성 제고 요청

-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을 발표('15.6월)하고, 공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 완료 ('15.7월)

* 투자자보호 공시강화, 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중복공시 통폐합 및 불필요한 공시의무 폐지, 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 도입 등

- 중복공시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의무 완화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 전년대비 약 6.7%(약 2,300건) 공시부담 완화 기대
- 아울러, 투자판단에 미칠 중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시 규제 신설*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예: ① 주식형 사채 취득사항 공시, ② 최대주주 지위변경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제공 행위 공시, ③ 분식회계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조치 공시 등

(2) 향후 계획

- 거래소·금감원·상장협 등과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축 유도

(1단계 : '15년말, 2단계 고도화 작업 : '16.3월)

- 금융투자자를 위한 중요 정보의 적시성있는 전달을 위해 현행 열거주의식 공시제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열거주의) 공시규정에 나열된 중요 정보만 공시

→ (포괄주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정보를 스스로 공시

- ◆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1) 동향

- (총량) 과거 9%대에서 6%대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던 가계부채는 '14년부터 증가세 확대('15.6말 1,130.5조원)

* 가계신용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한국은행) :
('05~10년 평균)9.3 ('11년)8.7 ('12년)5.2 ('13년)5.7 ('14년)6.5 ('15.2분기)9.1

-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 가계대출 증가(조원, 금감원) : ('13.8~'14.7월)40.7 → ('14.8~'15.7월)89.4
은행 주담대 증가(조원, 금감원) : ('13.8~'14.7월)19.2 → ('14.8~'15.7월)66.0

-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완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주택거래(만호, 상반기) : (08)53.4 (10)39.1 (12)34.4 (14)47.3 (15)61.1
공동주택 분양승인(만호, 상반기) : (14상)14.7 (14하)19.8 (15상)21.8

- (구조) 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속 개선

- '15.3~4월 주택금융공사의 32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금년 상반기 중 '15년말 정책목표(35%)를 거의 달성

【 연도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은행권, %) 】

(단위 : %)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3말	'15.6말
분할상환	6.4	7.7	13.9	18.7	26.5	29.8	36.4
고정금리	0.5	3.1	14.2	15.9	23.6	27.6	34.4

(2) 대응방안

◇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

□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을 차질없이 이행

①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 은행 고정금리·분할상환 연도별 목표 상향 [15년 35% → 17년 (고정)40, (분할)45%]
- 분할상환 방식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은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② 금융기관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취급 유도

- 주담대 취급시에 활용하는 소득증빙 자료의 객관성 제고
- 변동금리 주담대인 경우 금리상승 리스크를 감안하여 대출한도 계산 등
- 상환능력 심사시에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감안하여 심사

③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 토지·상가의 담보인정 기준 강화 등

④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 제고

- 바젤3에 따른 은행 필요자본 산정시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안
- 주금공 자본금 확충, 주금공 유동화증권을 한은의 대출시 담보로 인정

□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8월부터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구성·가동중(8.21일, 8.28일)

나.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1) 추진 실적

□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추진 현황

① 대기업그룹 구조조정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제도

- 매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 취약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15.5월)

* '15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14년말 금융권 신용공여액 1조 2,727억원('13년말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41개 계열 선정

② 개별기업별 구조조정 : 기촉법 및 채권은행 자율협약

-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기준)은 상반기('15.6월), 중소기업은 하반기('14.10월)에 신용위험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등 추진

* 개별기업별 구조조정 현황

- (대기업)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35개사(C등급 16개, D등급 19개) 선정
(구조조정대상 대기업(개)):('12)36→('13)40→('14)34→('15)35)
- (중소기업)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125개사(C등급 54개, D등급 71개) 선정
(구조조정대상 중소기업(개)):('12)97→('13)112→('14)125)

(2) 향후 계획

- ① (신용위험평가 강화)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엄정성 제고 및 업종별 수시평가 활성화를 통해, 개별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
- ② (기촉법 상시화) 현행법 일몰('15.12월말)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작업을 완료하여,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 ③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부실금융채권 등을 출자받은 민간 PEF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토대로 한 구조조정 시스템 검토
- ④ (기 타) 중소기업·해운사 자산매입 후 임대지원(S&LB), 해운보증기구, 회사채신속인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기업 지원

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1) 추진 실적

□ 조사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엄정 단속

○ (패스트트랙) 신속한 증거 및 신병확보가 긴요한 사건은
즉시 검찰에 통보

* '15.1~8월간 패스트트랙으로 총 12건, 자체조사 등 증선위 의결을 통해
37건을 검찰 고발·통보

구분	부정거래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계
패스트트랙	2	6	4	12
증선위 의결	6	14	17	37

○ (강제조사) 자체 조사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과 침단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 효과성 제고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2회 실시('15.6월)하고 검찰의
협조를 통해 디지털포렌식(복원) 기법 활용

(2) 향후 계획

□ 중요 투자정보에의 우월한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 및
상장사 임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 이를 위해 제보·접수 활성화를 위한 유선 핫라인 및 온라인
제보 홈페이지 개설 등 조사 인프라 강화

□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

* ① 다차정보수령자 ② 외부자가 생성한 중요정보 이용 ③ 목적성
없는 시세조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15.7.1 시행)

○ 투자자·금융회사 및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해설책자 제작·배포 및 찾아가는 설명회 지속 추진